

# 인터뷰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

## ‘출판및인쇄 진흥법 일부법률개정안’ 발의

-도서정가제의 본질  
‘제값 지불하고 책 사는 문화 만들기’

-‘인터넷 여론,  
그 자체는 존중하지만 설득 노력 계속’



‘출판및인쇄진흥법 일부 법률개정안’을 발의한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은 “도서정가제는 온라인서점을 죽이려는 것이 결코 아니고, 잘못된 온라인 상거래를 바로 잡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스스로도 출판사를 경영한 적이 있는 우 의원은 “출판유통에 있어 온라인상거래의 장점을 유지·발전시키는 것이 도서정가제 본래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특히 “인터넷 여론은 이해당사자인 온라인 서점에서 이끈 측면이 있어 현재 드러난 의견은 반드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네티즌들 역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도서정가제는 책값을 올려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자는 것이며, 대형서점을 배불린다고 보단, 최소한 도서정가제를 통해 중소서점 몰락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이 강조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31일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23명이 완전 도서정가제 실시를 주요 골자로 하는 ‘출판및인쇄진흥법 일부 법률개정안’ (이하 개정안)을 발의했다. ▲할인을 염두에 둔 가격 책정으로 인한 책값 상승 ▲전문학술도서 등 비인기 도서의 기피로 인한 독서기회 상실과 학문 및 지식문화 후퇴 ▲할인경쟁으로 인한 영세서점의 도산 ▲외국 거

대자본 기업의 무차별적인 할인경쟁으로 국내출판시장 잠식 등이 이번 개정안 발의의 주된 이유였다. 이에 따라 1년 이내의 책에 한해 정가판매를 의무화하고, 인터넷서점은 1년 이내의 책이라도 10퍼센트 내에서 할인판매를 허용하는 한편,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규정한다는 기존의 법안을 개정안에서는 우선 2007년까지라는 한시규정을 삭제하고 인터넷서점 10퍼센트 할인 예외 조항을 비롯해 마일리지 할인쿠폰 등 유사 할인판매 등도 온·오프라인 서점의 형평성을 들어 삭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4월 6일 이번 개정안을 놓고 공개정책토론회를 거친 우 의원은 지난 4월 18일 문광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해 심의를 회부했다. 하지만 대다수 여야의원들은 이번 개정안 처리에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온·오프라인 서점 등 이해당사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고, 결국 차후 대책 토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소위에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다음 회기로 미루어졌다.

문광위 법안심사소위에 개정안이 상정되기 전인 지난 4월 15일 우상호 의원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나 도서정가제와 네티즌의 반응에 대한 우 의원의 생각을 들어봤다.

도서정가제 문제로 인터넷이 시끄럽다. 한 인터넷업체에서 실시한 찬반투표에서는 99퍼센트 가까이 완전도서정가제 실시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2003년 도서정가제를 법제화하면서 경험한 바 있다. 때문에 어느 정도 네티즌들의 반발은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 여론은 이해당사자인 온라인 서점에서 이끈 측면이 있다. 물론 현재 드러난 의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지만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견이라고 보기 힘든 측면이 있다.

● 여러 현안이 있을 것이다. 그 중 도서정가제를 문제 삼은 이유는 무엇인가?

국문과 출신이고 문학에 관심이 많았다. 그리고 1994년에는 도서출판 두리를 경영하기도 했다. 국회의원이 되면 문광위로 가서 일해야겠다고 항상 생각했다. 출판계의 여러 가지 당면과제 중 우선과제로 도서정가제를 선택했다. 출판사를 운영해 본 탓에 도서정가제가 없을 경우의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동네서점과 소규모 출판사를 죽이는 불완전한 도서정가제를 더 이상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 네티즌들은 우 의원의 출판사 대표 경력을 문제 삼고 있기도 하다.

방금 말했듯이 물론 내가 출판사를 운영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나는 지금 출판계를 떠난 상태다. 물론 출판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이 아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출판계에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책을 쓴 사람은 많을지 몰라도 돌베개를 설립한 이해찬 총리를 제외하면 정치계에 출판사를 운영해 본 사람은 많지 않다. 책을 좋아하는 것하고 출판산업을 이해하는 것하고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오히려 내가 출판사를 경영해 봤기 때문에 이 문제에 나서는 것이 당연하다. 정보통신분야나 과학분야에서 일한 사람이 이 문제를 다루는 게 옳은가.

●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론은 어떻게 수렴했나?

오해하는 것처럼 단지 중소형서점과 일부 출판계의 의견만 수렴한 것은 아니다. 인터넷서점 대표들을 만나 소주도 한 잔 하면서 허심탄회하게 이번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사실 온라인서점 사람들도 이전부터 개인적으로 잘 알던 사람들이다.

온라인서점에서 이번 법안에 대해 온라인서점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냐는 위기의식을 느낀 게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은 아니다. 온라인 상거래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틀림없이 출판유통에 있어 온라인상거래의 장점이 있다. 이를 유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 기본적으로 공산품과는 다른 잣대를 대자는 것인데 책은 다른 상품과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책은 단지 다른 공산품처럼 사고팔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한 권의 책이 미치는 영향은 일반 공산품과 비교할 수가 없다. 한 사람의 미래, 한 집단의 미래, 한 나라의 미래가 책으로 인해 바뀔 수 있다. 다른 문화상품과 비교해도 그렇다. 요즘 잘 나가는 영화나 게임 등도 책이 없이 지금의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책은 모든 문화의 근간이 된다. 일부 네티즌들은 다른 문화상품도 있는데 왜 책만 지나치게 보호하려고 하느냐고 그러는데 모든 문화상품의 밑바탕에 책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 그렇다면 네티즌들이 어떤 부분에서 오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물론 소비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입장을 충실하게 드러낸 것임으로 그 의견은 존중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좀더 고민해보자. 도서정가제를 시행하면 일부 대형서점의 배만 부르게 한다고 말한다. 일리가 있다. 개인적으로도 완전 도서정가제를 한다고 해서 그동안 온라인서점을 이용하던 고객들이 중소형서점으로 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대로 놔둘 경우 중소형서점의 위기는 가중될 수밖에 없다. 더 큰 취지를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최소한 도서정가제를 통해 중소서점 몰락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서점하나 없는 동네를 상상해 보라.

두 번째, 도서정가제가 없다면 가격이 올라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는 논리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다른 상품은 다 인터넷에서 할인을 받는데 책은 그럴 수 없게 된다는 불만일 것이다. 일시적으로는 그렇다. 하지만 싼 데는 이유가 있다. 도서정가제는 책값을 올려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자는 의도다. 할인받지 못하니 손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적당한 비윤지는 모르겠지만 출판계 못지않게 열악한 연극계를 예로 들어보자. 연극계에 만연하는 게 공짜표다. 관객의 입장에서 공짜로 연극을 볼 수 있다면 이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공짜표 때문에 연극은 무너진다.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고 하지만 일부 배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스태프들은 평균 월급 25만 원을 받고 일한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연극계가 발전할 수 있겠는가. 출판 역시 열악한 동네다. 박봉을 받으면서 야근에 시달린다. 이를 시장원리에만 맡겨둘 수는 없지 않다. 기본적 여건보장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값'을 지불하고 책을 사는 문화가 중요하다. 힘들겠지만 의식을 바꾸어야 한다.

● **현행법대로 2008년부터는 도서정가제가 폐지된다**

우리 출판계는 어떤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현재 온라인만 할인과 마일리지가 허용되고 있고 오프라인은 그렇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고 오프라인서점이 할인을 안해준 만큼 더 남기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차이가 날 수 있는 현실적인 배경은 출판사에서 온라인에 더 낮은 가격으로 책을 공급하기 때문이다. 출판사가 오프라인에 70퍼센트선에서 공급하는 것에 비해 온라인에는 60~50퍼센트 선에서 책을 공급하고 있다. 만약 온라인과 같이 오프라인에 할인을 허용할 경우 틀림없이 출판사는 오프라인서점에도 더 낮은 가격에 책을 공급해야 한다. 그럼 그 부담은 어디로 가겠는가. 고스란히 출판사로 간다. 도서정가제가 시행되지 않을 경우 대형출판사와 대형서점, 온라인서점만 남게 될 것이다. 나머지는 하청업체가 되거나 문을 닫을 게 불 보듯 뻔하다.

전집류를 주로 팔던 방문판매 시절을 떠올려 보라. 요즘의 의류업체를 떠올려도 좋다. 당시에도 전집류의 가격이 30~50퍼센트 할인된 가격에 유통되는 게 상식이었다. 할인을 염두에 둔 것이다. 도서정가제가 무너지면 다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물론 동네서점도 반성하고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온라인서점의 활성화는 할인가격만을 무기로 성취된 게 아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질 개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네서점은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다.

● **완전 도서정가제 말고는 방법이 없는가?**

없다. 다만 개인적으로 프랑스 수준이면 괜찮다고 본다. 도서정가제를 실시하면서 예외적 조항으로 일부 도서에 대해 5퍼센트의 할인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원칙에서 절대 양보는 없다.

● **완전 도서정가제 말고 출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유통구조의 전근대성을 해결하기 위해 도서정보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하고, 어음 등 불합리한 결제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번역과 관련해 투자도 늘려 외국에 국내 책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외에도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다. 앞서 말했듯 나는 국회에서 그 누구보다 출판산업의 현실을 잘 이해하고 있다. 자만이 아니다. 내가 잘 할 수 있는, 또 하고 싶은 것이다. 도서정가제는 우선과제일 뿐이다. 앞으로도 출판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이다. ■■

취재\_신동섭 기자 | 사진\_박신우 기자

“인터넷 여론은 이해당사자인 온라인 서점에서 이권 측면이 있어 현재 드러난 의견은 반드시 공평하고 객관적인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네티즌들 역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 도서정가제는 책값을 올려 팔겠다는 것이 아니라, 절당한 가격 을 지불하지는 것이며, 대형서점을 배물린다고 보면, 최소한 도서정가제를 통해 중소서점 몰락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이 강조돼야 한다”



**이상호 의원은** 이상호 의원은 철원 동송 태생으로 초등학교 6학년 때 서울로 와 서울 용문고와 연세대 국문학과를 졸업했다. 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며 시를 쓰는 것이 꿈이었던 우 의원은 재학시절 오월문학상과 윤동주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연세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우 의원은 1987년 6월 항쟁을 이끌었고 이후 나라사랑청년회, 연세민주동문회 사무총장,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부대변인, 전대협 동우회 회장을 역임했다. 지난 대선에서는 노무현 대통령후보선대위 국민참여운동본부 상임부본부장을 맡아 대선을 승리로 이끄는 데 기여했으며 현재 17대 초선의원으로 열린우리당 열린정책연구원 부원장, 대통령자문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의 자문위원,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 고려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 Oh My News 기획위원, 한국청년연합회 지도위원, 이한열 추모사업회 사무국장 등을 맡고 있다. 지난 1994년부터 1998년까지 도서출판 두리를 경영했고, 99년에는 방송개혁위원회 전문위원 및 대변인을 맡았었다. 이러한 경험을 살려 문화관광위원회를 희망했었고 현재 문화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